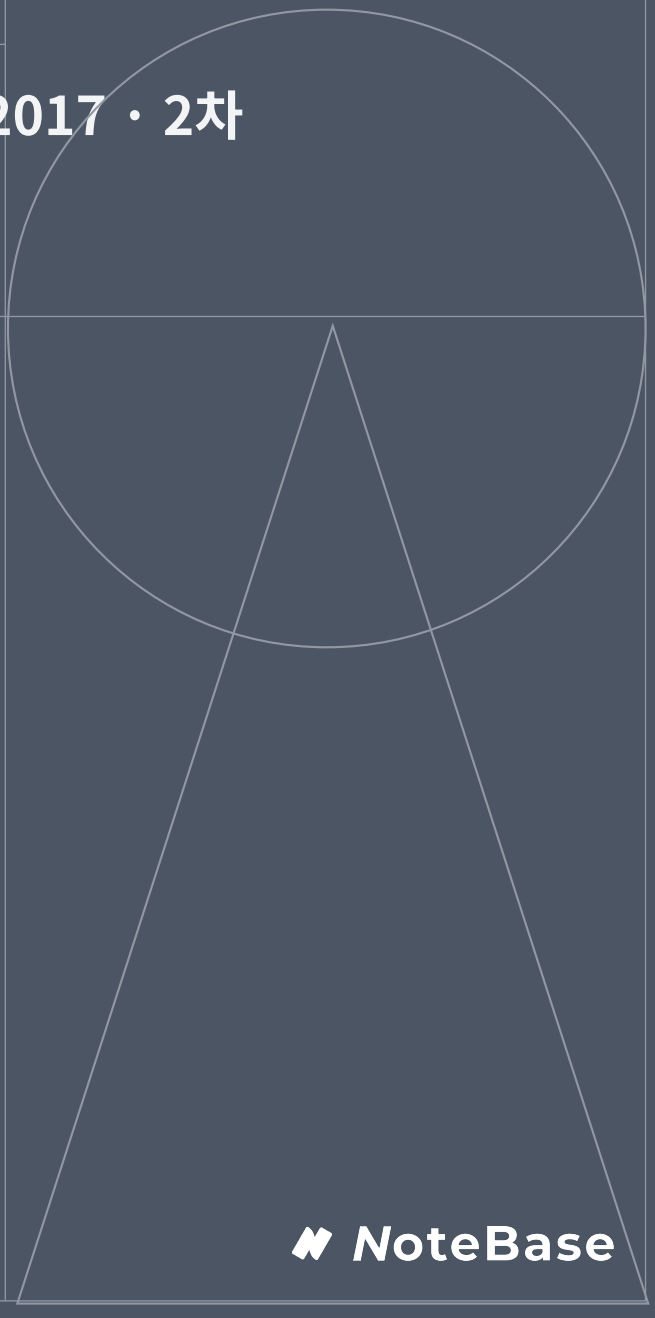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7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7 · 2차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7 · 2차

문 1.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실업의 유형과 일치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비원 사라진다. 4차 산업혁명의 명암
○○대 관악캠퍼스에서 '경비 아저씨'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경비 업무가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탓이다. 이제 경비원이 하던 불침번은 눈 밝은 감시 카메라가, 손전등 순찰은 예민한 센서가 대신한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①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와 경기 침체, 인원 감축으로 실직하였다.

②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었다.

③ 농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계절 요인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④ 스마트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은행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업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기사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기계가 경비 업무를 대체하여 기존 노동자의 기능과 새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맞지 않게 된 구조적 실업이 나타난다.

핵심 개념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나 기술의 변화로 노동 수요가 바뀌어 노동자가 보유한 기능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는 실업이다. 키워드는 기술 변화·산업 재편·기능 불일치이다.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총수요와 생산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키워드는 불황·생산 감소·인원 감축이다.
마찰적 실업: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탐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반복적으로 변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경기 침체, 인원 감축'은 총수요와 생산 감소에 따른 경기적 실업의 사례이다. 구조적 실업의 사례로 고치면 '기술 또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기존 직무가 사라져 실직하였다'가 된다.
② X —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직장 탐색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의 사례로 고치면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가 된다.
③ X — '계절 요인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농업·건설업 등에서 나타나는 계절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의 사례로 고치면 '산업 구조가 바뀌어 기존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 실직하였다'가 된다.
④ O — 스마트뱅킹이라는 기술이 은행 창구 업무를 대체하여 은행 직원의 일자리가 사라진 사례이다.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 변화라는 점에서 기사의 구조적 실업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실직이라는 결과만 보고 모든 선지를 같은 유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①의 '경기 침체', ②의 '더 나은 직장 탐색', ③의 '계절 요인', ④의 '스마트뱅킹 보편화'가 각각 실업의 원인을 가르는 결정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업의 원인을 먼저 찾는다. 불황이면 경기적 실업, 구직·이직 중의 일시적 공백이면 마찰적 실업, 계절 변화이면 계절적 실업, 기술 발전이나 산업 구조 변화로 직무·기능의 불일치가 생기면 구조적 실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불황은 경기적, 이동은 마찰적, 계절은 계절적, 기술·산업 변화와 기능 불일치는 구조적 실업이다.

NoteBase

문 2. 다음은 어느 나라의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분 \ 연도	2010	2012	2014
직접세	46.5	50.9	55.6
간접세	53.5	49.1	44.4

① 과세의 형평성이 개선되고 있다.

②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

③ 조세에 대한 저항감이 점점 증대될 것이다.

④ 국민의 조세 부담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성 비율 변화를 읽고, 직접세 비중 상승의 일반적 효과와 전체 조세 부담의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연도의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합계 100인 구성비임을 확인한다.
2. 직접세는 46.5에서 50.9, 55.6으로 상승하고 간접세는 53.5에서 49.1, 44.4로 하락했음을 확인한다.
3. 구성비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효과와 총조세액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조세 부담을 구분한다.

핵심 근거

자료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나타낸다. 직접세 비중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응능부담 원칙과 누진성을 통해 과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납세자가 세 부담을 직접 인식하므로 조세 저항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세금 규모나 국민소득 자료가 없으므로 국민의 총조세 부담이 증가했는지는 알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직접세 비율은 2010년 46.5에서 2014년 55.6으로 상승했다.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등 담세 능력에 따라 부과되므로 그 비중이 커지면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
② O — 직접세 비율이 46.5에서 55.6으로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누진적 직접세의 비중이 커지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효과도 커질 수 있다.
③ O — 직접세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직접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직접 납부하여 부담을 분명하게 인식하므로, 직접세 비중이 커질수록 조세에 대한 저항감도 커질 수 있다.
④ X — 표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성 비율만 제시되어 있을 뿐 총조세액이나 국민소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이 자료만으로는 국민의 전체 조세 부담이 증가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직접세 비중의 상승을 국민이 내는 세금 총액의 상승으로 바꿔 읽게 하는 선지이다. 구성비가 변해도 전체 조세액은 증가·감소·불변 중 어느 경우도 가능하므로, 비율 자료만으로 절대적 조세 부담을 판단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접세·간접세 자료에서는 먼저 각 수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인지 확인한다. 구성비 자료로는 세목 간 비중 변화와 그 일반적 성격은 판단할 수 있지만, 총조세액이나 조세부담률의 변화는 총액 또는 국민소득 자료가 따로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직접세 비중 상승은 형평성·재분배·조세 저항의 상승과 연결되지만, 구성비 상승이 곧 총조세 부담 상승을 뜻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과 같은 유형의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고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체결 당사국만 구속한다.
㉡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이다.
㉢ 법의 일반 원칙으로 가입국들에게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다.
㉣ 불문화된 형태지만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법의 법원 중 조약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조약이 성문 국제법이며 원칙적으로 조약 당사국을 구속한다는 점을 관습국제법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조약 = 국가 간에 국제법의 규율을 받도록 문서 형식으로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이다.
조약 당사국 = 해당 조약에 구속되기로 동의하고 그 조약이 효력을 가지는 국가이다.

핵심 구분

조약은 문서로 체결되는 성문 국제법이며 원칙적으로 당사국 사이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반면 관습국제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불문 국제법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a)는 조약을 문서 형식의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제26조는 발효 중인 조약이 그 당사국을 구속한다고 규정하며, 제34조는 제3국의 동의 없이는 그 국가에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과 ㉡은 모두 조약의 일반적 특성이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조약 당사국을 구속하고 문서 형식으로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② X — ㉠은 맞지만 ㉢은 틀리다. 틀린 표현은 '법의 일반 원칙으로 가입국들에게 적용되는 국제 규범'이다. 올바른 표현은 '국가 간에 문서 형식으로 체결되어 원칙적으로 조약 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적 합의'이다.
③ X — ㉡은 맞지만 ㉢은 틀리므로 적절한 조합이 아니다. ㉢의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의 법적 성격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조약은 당사국의 합의로 성립하는 성문 국제법이다.
④ X — ㉡은 맞지만 ㉣은 틀리므로 적절한 조합이 아니다. ㉣의 '불문화된 형태'와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은 조약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조약은 문서 형식으로 체결되고 원칙적으로 그 당사국을 구속한다.

오답 포인트

㉢의 '법의 일반 원칙'과 ㉣의 '불문화된 형태'를 조약의 특성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조약의 핵심 표지인 '문서 형식'과 '당사국 구속'을 함께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법의 유형을 묻는 문항에서는 먼저 성문 여부와 구속 대상을 확인한다. '문서 형식·당사국 구속'이면 조약이고, '일반적 관행·법적 확신·불문'이면 관습국제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약은 문서로 합의하고 당사국을 구속한다.

NoteBase

문 4. X재의 가격 상승으로 X재에 대한 수요가 35% 감소했다. 그러나 X재의 판매 수입은 15% 증가했다고 한다.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X재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② X재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③ X재의 공급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④ X재의 공급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판매 수입이 증가한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다. X재의 가격은 상승했고 수요량은 35% 감소했지만, 판매 수입은 오히려 15% 증가했다. 이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가 수요량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효과보다 컸다는 뜻이다.

사용할 공식

판매 수입은 $TR = P \times Q$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E_d=≤ft|수요량 변화율가격 변화율|이다. 가격과 판매 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계산 과정

최초 가격과 수요량을 각각 P, Q라고 한다. 수요가 35% 감소했으므로 새로운 수요량은 $0.65Q$이다. 판매 수입이 15% 증가했으므로 $P' \times 0.65Q = 1.15PQ$이고, 따라서 $P' = \frac{1.15}{0.65}P \approx 1.769P$이다. 가격은 약 76.9% 상승했으므로 $E_d \approx \frac{35}{76.9} \approx 0.46 < 1$이다. 따라서 X재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선지 판단

① X — '수요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가격 상승과 판매 수입 증가가 함께 나타났으므로 올바르게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② O — 가격이 약 76.9% 상승할 때 수요량은 35% 감소하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약 0.46으로 1보다 작다. 따라서 가격 상승으로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③ X — '공급 가격 탄력성'이라는 판단 기준이 틀렸다.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수요량 반응과 판매 수입의 관계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판단하며, 올바르게는 X재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④ X — '공급 가격 탄력성'이라는 대상이 틀렸다. 비탄력적이라는 표현만 맞아 보여도 판매 수입 변화의 원인은 공급 탄력성이 아니라 수요 가격 탄력성이며, 올바르게는 X재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요량이 35% 감소했다는 사실만 보고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과 비교해 판단한다. 또한 ④는 '비탄력적'이라는 단어는 맞지만 '공급'으로 대상을 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과 판매 수입의 방향을 먼저 비교한다. 가격 상승 시 판매 수입도 증가하면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판매 수입이 감소하면 탄력적이며, 판매 수입이 변하지 않으면 단위탄력적이다.

암기 포인트

가격과 판매 수입이 같은 방향이면 비탄력적, 반대 방향이면 탄력적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교사라는 꿈을 실현한 갑은 학교에 처음 도입된 '스마트 교실'의 운영을 위해 퇴근 후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연수를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회사원 을은 요리사의 꿈을 실현하고자 매일 퇴근 후 요리 학원을 다니며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내가 반대하여 학원을 그만 두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① 갑은 꿈을 실현해 교사가 되었으므로 역할갈등이 없다.
② 갑은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이 일치한다.
③ 을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고 있다.
④ 을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속집단과 준거집단,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예기 사회화, 역할 갈등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갑은 꿈꾸던 교사가 되어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교사로서 연수를 계속하려는 요구와 입원한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요구 사이에서 고민한다.
을은 회사원이지만 장래에 요리사가 되기 위해 요리 학원에서 자격증을 준비하며, 아내의 반대로 고민한다.

핵심 개념

소속집단은 자신이 실제로 속한 집단이고, 준거집단은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다. 두 집단은 일치할 수도 있다.
예기 사회화는 장차 속하려는 집단의 규범과 행동 양식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이다.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학원·교육연수원 등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역할 갈등은 한 개인에게 요구되는 서로 다른 역할들이 양립하기 어려워 충돌하는 상태이다. 단순히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역할 갈등이 아니다.

적용 기준

현재 실제로 속한 집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집단을 구분하고, 사회화 기관은 설립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갈등은 서로 충돌하는 역할 기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갑은 교사의 역할에 따른 연수와 자녀의 역할에 따른 부모 돌봄을 동시에 요구받아 역할 갈등을 겪는다. '꿈을 실현했으므로 역할갈등이 없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갑은 교사 역할과 자녀 역할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한다'이다.
② O — 갑은 실제로 교사가 되어 학교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자신이 꿈꾸며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던 교사 집단에도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이 일치한다.
③ X — 을은 장래의 요리사 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미리 배우므로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지만, 요리 학원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을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고 있다'이다.
④ X — 아내가 학원 수강을 반대하여 생긴 고민은 사례에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역할 기대가 제시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의견 충돌이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역할 갈등'이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을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개인 간 의견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꿈의 실현 여부만 보고 역할 갈등을 부정하기 쉽고, ③에서는 학원을 일상적인 민간 기관이라는 이유로 비공식적 기관으로 오인하기 쉽다. 공식성은 운영 주체가 아니라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로 판단한다. 또한 ④처럼 고민이나 대립이 있다고 해서 모두 역할 갈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집단 문제는 '실제 소속'과 '판단 기준'을 나누고,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가 설립 목적이었는가'를 본다. 갈등 문제는 먼저 서로 충돌하는 두 역할 기대가 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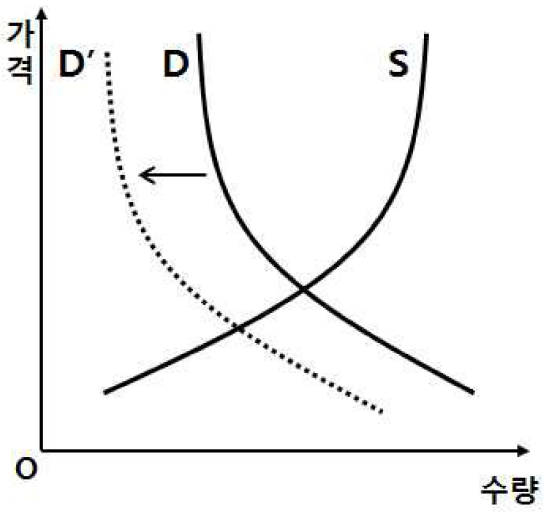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실제 소속은 소속집단, 행동의 기준은 준거집단이다. 미래 역할을 미리 배우면 예기 사회화이며, 역할끼리 충돌해야 역할 갈등이다.

NoteBase

문 6. 우리나라 담배 시장에서 <그림>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림>



① 담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②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였다.

③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보도가 대폭 증가했다.

④ 담뱃잎을 재배하는 지역이 태풍 피해를 입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요곡선 위에서 수요량만 변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임을 확인한다.
2. 공급곡선 S는 그대로이고 수요곡선이 D에서 D′로 왼쪽 이동했음을 확인한다.
3. 모든 가격 수준에서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는다.

NoteBase

핵심 근거

그림의 D→D′는 수요곡선의 좌측 이동, 즉 수요 감소를 뜻한다.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보도가 늘면 소비자의 선호가 담배에 불리하게 변하므로 담배 수요가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담배 가격의 하락은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고 기존 수요곡선 위에서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담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담배 가격 이외의 수요 결정 요인이 불리하게 변해야 D에서 D′로 이동한다.
② X — 담배를 정상재로 보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담배 수요를 증가시켜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였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정상재인 담배의 수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소득 요인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이다.
③ O — 유해성 보도의 증가는 담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낮춘다. 따라서 모든 가격 수준에서 담배 수요가 줄어 수요곡선이 D에서 D′로 왼쪽 이동한다.
④ X — 담뱃잎 재배 지역의 태풍 피해는 생산 원료의 공급을 줄여 담배의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원인'으로 본 것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공급 감소의 원인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가격 변화는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④는 담배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소비 측 요인이 아니라 생산 측 요인이므로 수요곡선 D의 이동 원인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화 자체의 가격이 변하면 같은 곡선 위에서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변한다. 소득·선호·관련재 가격·소비자 수 같은 가격 외 요인이 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생산비·기술·생산자 수 같은 생산 측 요인이 변하면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암기 포인트

자기 가격 변화는 곡선 위 이동, 선호 악화는 수요곡선 좌측 이동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동생활 공간에서 반려동물의 입장, 배설물 처리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 아파트에서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독극물을 살포 하겠다'는 경고문까지 등장했다.
-○○일보, 2017.08.12.-

①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낮은 외부 효과의 사례를 보여준다.

②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③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로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

④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사례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제3자가 불편과 피해를 입는 사례에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소비 활동이 공동생활 공간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과 처리 부담을 준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그 피해가 시장가격에 반영되거나 피해자에게 보상되지 않으므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핵심 개념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보상이나 대가 없이 편익 또는 비용을 주는 현상이다.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에서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고, 개인의 소비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진다.

적용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는 자신의 만족을 얻지만 배설물 등으로 생기는 제3자의 피해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는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이며, 부담금·과태료와 같은 부정적 경제적 유인으로 외부비용을 행동에 반영하면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낮다'는 관계가 틀렸다. 소비의 외부 불경제에서는 제3자의 피해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낮다. 올바르게는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높다'이다.
② X —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이 틀렸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비용을 의사결정자가 충분히 부담하지 않으므로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소비되거나 생산된다. 이 사례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소비 또는 문제 행동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③ O —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 활동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므로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이다. 부담금·과태료 등 문제 행동의 사적 비용을 높이는 부정적 경제적 유인은 그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X —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준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사 속 사례는 타인에게 이익이 아니라 불쾌감과 처리 부담이라는 피해를 준다. 올바르게는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고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비교 방향과 ②의 과소·과다를 뒤집기 쉽다. 외부 불경제에서는 제3자의 피해만큼 사회적 편익이 낮아지고, 시장의 소비량 또는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의 행동이 소비인지 생산인지 먼저 구분한 뒤, 제3자가 대가 없이 이익을 얻으면 외부경제, 보상 없이 피해를 입으면 외부불경제로 판단한다. 외부불경제라면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작고 시장 활동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암기 포인트

외부불경제는 제3자에게 보상 없는 피해를 주는 현상이며,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고 시장 활동량은 과다해진다.

NoteBase

문 8. 다음의 대표 선출 방식 (A),(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오랫동안 채택해 온 선거방식이다. 이는 한 번의 선거로 당선자를 가릴 수 있는 간편함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 선출 방식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선거구별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B)는 각 정당이 자기 당 후보의 명부를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의사를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보기>
㉠ (A)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줄어든다.
㉡ (A)는 다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양당제 형성을 촉진한다.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A)와 (B)를 병행하고 있다.
㉣ (A)보다 (B)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구별하고, 각 진술의 옳고 그름을 조합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이다. 당선되지 못한 후보에게 던진 표가 의석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표가 많이 생기고,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커지며, 다수당과 양당제에 유리한 경향이 있다.
(B)는 정당이 제시한 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유권자의 정당 지지 분포를 의석에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므로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의석 진출을 돕는다.
보기 판단: ㉠ X — 투표율 상승만으로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 O — (A)는 다수당에 유리하여 양당제 형성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 O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의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운용한다. ㉣ X —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방식은 (B)가 아니라 (A)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이 틀리다. ㉠의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줄어든다'는 필연적 관계가 아니다.
② X — ㉠·㉣ 모두 틀리다. ㉠은 투표율과 불비례성의 관계를 잘못 단정했고, ㉣은 사표가 더 많이 생기는 제도를 반대로 서술했다.
③ O — ㉡·㉢은 모두 옳다.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는 다수당에 유리하여 양당제 형성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한다.
④ X — ㉣이 틀리다. ㉣의 '(B)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표현은 '(A)에서 사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은 투표율이 높아지면 대표성도 자동으로 높아진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는 선거제도의 의석 배분 방식과 정당별 득표 분포에 좌우되며, 투표율 상승 자체가 격차 축소를 보장하지 않는다. ㉣은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제도를 서로 뒤바꾼 진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거구별 1위 후보가 당선'이면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로 보고 사표 증가·다수당 유리·양당제 촉진을 연결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이면 비례대표제로 보고 사표 감소·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 향상·소수 정당 진출 가능성을 연결한다. 조합형에서는 먼저 각 진술을 독립적으로 O/X 판단한 뒤 선지 조합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는 '1등 당선·사표 증가·다수당 유리',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 반영·사표 감소·소수 정당 유리'이다.

NoteBase

문 9. 다음 <표>는 어떤 연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설 설정	낮잠을 자면 수험생의 합격률이 올라간다.
조사 대상	지능과 성적이 비슷한 ○○학원 해양경찰 수험생 100명
자료 수집	수험생 100명을 5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하고 두 달 뒤 합격률을 비교 → A집단은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도록 함. → B집단은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함.
분석 결과	낮잠을 잔 수험생의 합격률이 더 높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성적을 올리려면 낮잠을 자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A는 통제집단, B는 실험집단이다.

②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였다.

③ 연구 결과를 수험생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④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귀납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험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고, 표본의 대표성·결과의 일반화 가능성·가설 검증의 추론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처치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구분한다.
2. 조사 대상이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3. 연구가 가설을 먼저 세우고 검증했는지 확인한다.
4. 표본의 범위를 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A집단에는 낮잠이라는 처치를 가했고 B집단에는 처치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A는 실험집단, B는 통제집단이다. 또한 조사 대상은 특정 학원 해양경찰 수험생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수험생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수험생 일반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자료 수집 항목에서 A집단만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도록 했다. 낮잠이라는 처치를 받은 A가 실험집단이고, 처치를 받지 않은 B가 통제집단이다. 틀린 표현인 'A는 통제집단, B는 실험집단'은 'A는 실험집단, B는 통제집단'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조사 대상 항목에는 지능과 성적이 비슷한 특정 학원 해양경찰 수험생 100명만 제시되어 있다. 이는 모집단 전체에서 대표성 있게 표집한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였다'는 판단은 근거가 없다. 올바르게는 '특정 학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다.
③ O — 표본이 특정 학원 해양경찰 수험생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결과를 지역·학원·시험 종류 등이 다른 전체 수험생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④ X — 연구자는 '낮잠을 자면 합격률이 올라간다'는 가설을 먼저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했다. 이는 일반적 가설에서 구체적 관찰 결과를 확인하는 연역적 연구 절차이다. 틀린 표현인 '귀납적으로'는 '연역적으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처치 여부로 집단을 구분해야 한다. ②에서는 두 집단의 지능과 성적이 비슷하다는 동질성 확보를 표본의 대표성 확보로 착각하기 쉽다. ④에서는 관찰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귀납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며, 가설을 먼저 세우고 검증한 절차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험 문제에서는 '처치 있음=실험집단, 처치 없음=통제집단'으로 구분한다. 일반화 가능성은 집단 간 동질성이 아니라 표본의 대표성으로 판단하고, 가설을 먼저 설정한 뒤 자료로 검증하면 연역적 절차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처치 여부는 집단 구분, 대표성은 일반화, 가설 선행은 연역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보기에서 공부 시간을 1시간 단위로 나눌 때, 남은 시간을 과목별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 보 기 >

내일이 시험 마지막 날이다. 영수에게는 이제 남은 과목은 형법과 형소법, 해사법규 세 과목뿐이고 앞으로 공부할 시간은 6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공부 시간당 점수 상승폭>

과목	첫 번째 1시간	두 번째 1시간	세 번째 1시간	네 번째 1시간	다섯 번째 1시간	여섯 번째 1시간
형법	11점	7점	5점	4점	3점	1점
형소법	15점	13점	8점	6점	2점	1점
해사법규	10점	9점	6점	5점	3점	0점

① 형법: 2시간, 형소법: 2시간, 해사법규: 2시간

② 형법: 1시간, 형소법: 3시간, 해사법규: 2시간

③ 형법: 1시간, 형소법: 4시간, 해사법규: 1시간

④ 형법: 2시간, 형소법: 3시간, 해사법규: 1시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각 과목에 1시간을 더 공부할 때 얻는 한계점수 상승폭을 비교하여, 총점 증가가 가장 큰 6개의 공부 시간을 배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 공부 시간은 6시간이며 1시간 단위로 배분한다. 표의 각 수치는 해당 과목의 첫 번째, 두 번째 등 각 1시간에서 추가로 얻는 점수이다. 한 과목의 뒤쪽 시간을 선택하려면 그보다 앞선 시간도 먼저 공부해야 한다.

사용할 원리

한계편익이란 어떤 활동을 한 단위 더 할 때 추가로 얻는 편익이다. 각 과목의 다음 1시간이 주는 점수 상승폭을 비교하여 가장 큰 것부터 선택하면 총점 증가가 최대가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6시간에 해당하는 가장 큰 상승폭은 형소법 첫째 시간 15점, 형소법 둘째 시간 13점, 형법 첫째 시간 11점, 해사법규 첫째 시간 10점, 해사법규 둘째 시간 9점, 형소법 셋째 시간 8점이다. 따라서 형법 1시간, 형소법 3시간, 해사법규 2시간으로 배분하며 총점 상승은 11+15+13+8+10+9=66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형법 2시간, 형소법 2시간, 해사법규 2시간의 총점 상승은 (11+7)+(15+13)+(10+9)=65점이다. 형법의 둘째 시간 7점을 형소법의 셋째 시간 8점으로 바꾸면 1점이 늘어난다. 틀린 배분인 '형법 2시간, 형소법 2시간'은 '형법 1시간, 형소법 3시간'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형법 1시간, 형소법 3시간, 해사법규 2시간의 총점 상승은 11+(15+13+8)+(10+9)=66점으로 네 선지 중 가장 크다.
③ X — 형법 1시간, 형소법 4시간, 해사법규 1시간의 총점 상승은 11+(15+13+8+6)+10=63점이다. 형소법의 넷째 시간 6점보다 해사법규의 둘째 시간 9점이 크므로, '형소법 4시간, 해사법규 1시간'은 '형소법 3시간, 해사법규 2시간'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형법 2시간, 형소법 3시간, 해사법규 1시간의 총점 상승은 (11+7)+(15+13+8)+10=64점이다. 형법의 둘째 시간 7점보다 해사법규의 둘째 시간 9점이 크므로, '형법 2시간, 해사법규 1시간'은 '형법 1시간, 해사법규 2시간'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과목별 누적점수나 공부 시간의 균등 배분만 비교하면 안 된다. 이 문항의 함정은 각 과목에 다음 1시간을 투입했을 때 추가되는 점수, 즉 한계점수 상승폭을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택안에서 선택된 시간별 상승폭을 모두 더한 뒤 총합을 비교한다. 더 빠르게 풀 때는 현재 선택된 가장 작은 상승폭과 선택되지 않은 다음 상승폭을 교환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제한된 자원의 최적 배분은 '다음 한 단위의 한계편익이 큰 곳부터'이다.

NoteBase

문 11. 다음에서 강조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관찰이나 조사를 통해 수집된 수량적 자료의 분석보다는 행위자들의 주관적 감정과 의미, 동기 등을 이해하기 위한 감정 이입이나 해석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즉 인간의 행위를 외양적으로만 관찰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며 그 행위자들의 감정이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때 비로소 행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보기>
㉠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한다.
㉢ 주로 참여 관찰법과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 행위의 이면을 이해하려고 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와 동기를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며, 참여 관찰법·심층 면접법 등으로 수집한 비수량적 경험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 X: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이 아니라, 두 현상은 본질적으로 달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 O: 질적 연구도 관찰·면접 등으로 현실에서 수집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한다. 경험적 자료가 반드시 수량적 자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O: 참여 관찰법과 심층 면접법은 행위자의 의미와 동기를 깊이 파악하는 데 적합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다.
㉣ O: 질적 연구는 감정 이입과 직관적 통찰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의도와 의미를 이해하려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과 ㉢을 고른 조합이지만 ㉠이 틀렸다. ‘방법론적 일원론’은 ‘방법론적 이원론’으로 고쳐야 하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② X: ㉠과 ㉣을 고른 조합이지만 ㉠이 틀렸다. 질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에 자연 과학과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하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③ O: ㉡, ㉢, ㉣은 모두 질적 연구의 특징이다. 질적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며, 참여 관찰과 심층 면접을 통해 행위의 이면에 있는 주관적 의미를 이해한다.
④ X: ㉠, ㉡, ㉢, ㉣을 모두 고른 조합이지만 ㉠이 틀렸다. ‘네 진술 모두 옳다’가 아니라 ‘㉡, ㉢, ㉣만 옳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의 ‘경험적 자료’를 ‘수량적 자료’와 같은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질적 연구도 관찰과 면접을 통해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지만, 그 자료가 주로 언어·행동·맥락 등 비수량적 형태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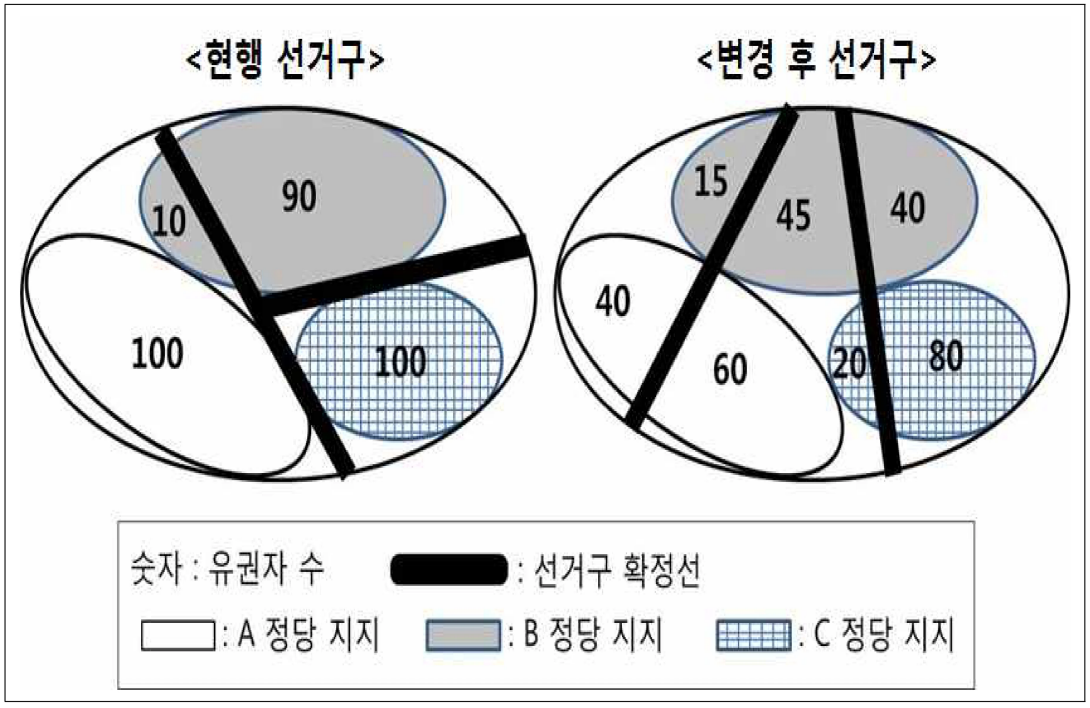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동기·감정 이입·해석·참여 관찰·심층 면접이 제시되면 질적 연구로 판단한다.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질적 연구는 ‘이원론·의미 이해·참여 관찰·심층 면접’, 양적 연구는 ‘일원론·법칙 발견·통계 분석’이다.

NoteBase

문 12. 갑 지역에는 모두 300명의 유권자가 살고 있으며, 이들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각각 100명씩 A, B, C 정당을 지지한다. 갑 지역이 소선거구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 선거구 변경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갑 지역의 유권자 선호는 변화하지 않음.)



① <변경 후 선거구>에서 게리맨더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선거구 획정 방식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현행 선거구>에 따르면 세 개의 정당은 각각 하나의 선거구에서 승리한다.

④ <변경 후 선거구>는 선거구별 인구의 편차가 커져 보통 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거구 획정선을 기준으로 각 선거구의 정당별 지지자 수를 합산하여 승리 정당과 선거 원칙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범례에서 흰색은 A 정당, 회색은 B 정당, 격자무늬는 C 정당 지지 지역임을 확인한다.
2. 굵은 선으로 나뉜 각 선거구 안의 정당별 유권자 수를 합산한다.
3. 소선거구에서는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승리한다는 점을 적용한다.
4. 선거구별 인구 차이는 보통 선거가 아니라 평등 선거의 원칙과 연결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현행 선거구에서는 A 정당 지지자 100명인 선거구, B 정당 지지자 90명과 A 정당 지지자 10명이 있는 선거구, C 정당 지지자 100명인 선거구가 형성되어 A·B·C 정당이 각각 한 곳에서 승리한다. 변경 후에는 왼쪽 선거구에서 A가 40 대 15로, 가운데 선거구에서 A가 60 대 45 대 20으로, 오른쪽 선거구에서 C가 80 대 40으로 승리한다. 따라서 변경 후에는 A 정당이 두 곳, C 정당이 한 곳에서 승리하고 B 정당은 승리하지 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변경 후 A 정당은 전체 지지자가 100명으로 다른 정당과 같지만 두 선거구에서 승리한다. 선거구 경계의 변경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므로 게리맨더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② O — 현행 선거구에서는 세 정당이 각각 한 곳에서 승리하지만, 변경 후에는 A 정당이 두 곳, C 정당이 한 곳에서 승리한다. 유권자 선호가 그대로여도 획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③ O — 현행 선거구에서 A 정당은 지지자 100명인 왼쪽 선거구, B 정당은 B 지지자 90명과 A 지지자 10명인 위쪽 선거구, C 정당은 지지자 100명인 오른쪽 선거구에서 각각 승리한다.
④ X — 변경 후 선거구별 인구는 왼쪽 55명, 가운데 125명, 오른쪽 120명으로 편차가 크다. 그러나 틀린 표현은 ‘보통 선거의 원칙’이다. 보통 선거는 재산·성별·신분 등에 따른 선거권 제한을 두지 않는 원칙이고,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평등 선거이다. 올바르게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커져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 자체는 정확히 짚었지만, 이를 보통 선거와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인구 편차로 한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는 평등 선거에 관한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거구 자료에서는 먼저 경계 안의 정당별 수를 합산해 승자를 정한다. 이어 선거권자의 자격 제한은 보통 선거, 표의 가치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는 평등 선거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선거권을 넓게 보장하면 보통 선거, 한 표의 가치를 같게 하면 평등 선거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일부 ㉠다국적 기업의 현지 근로자는 그 기업 본국의 경영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국인 경영자는 본국과 현지 사이의 문화 및 민족성 차이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윗사람이 자리를 비울 때 현지 근로자는 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데 비해 본국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현지 근로자의 자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반면 현지 근로자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 토착화할 것과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본국 근로자는 ㉤본국과 현지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문명'과 '미개'의 위계적 서열로 인식하기도 한다.

① ㉡이 가진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② ㉢은 문화접변, ㉤은 문화지체에 해당한다.

③ ㉠은 문화전파, ㉢은 문화접변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④ ㉢과 ㉣을 요구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화 전파·문화 접변·문화 지체의 의미와 자문화 중심주의·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화 전파: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전달되어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다.
문화 접변: 서로 다른 문화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 문화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화 지체: 물질문화의 빠른 변화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해 부조화가 생기는 현상이다.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각 문화를 그 사회의 고유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은 본국의 문화적 기준으로 현지 근로자의 자율성을 낮다고 평가하므로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에 가깝다. 틀린 표현은 '문화 상대주의'이며, 올바르게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② X — ㉢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 문화에 맞게 변화하도록 요구하므로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은 문화 변화 속도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화 지체가 아니라, 본국과 현지 문화를 '문명'과 '미개'로 서열화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틀린 표현은 '㉤은 문화지체'이며, 올바르게는 '㉤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③ O — ㉠은 본국의 경영방식이 현지 근로자에게 전달된 문화 전파의 사례이다. ㉢은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 속에서 기업이 현지 문화에 맞게 변화하도록 요구하는 문화 접변의 사례이다.
④ X — ㉢의 현지화 요구와 ㉣의 문화적 고유성 존중 요구는 현지 문화를 본국 문화보다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태도가 아니다. 특히 ㉣은 각 문화의 고유한 맥락을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와 연결된다. 틀린 표현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며, 올바르게는 '현지 문화의 고유성과 맥락을 존중하려는 태도'이다.

오답 포인트

㉡의 '문화 및 민족성 차이를 강조한다'는 말만 보고 문화 상대주의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에서 본국 문화를 기준으로 현지 근로자를 낮게 평가하므로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또한 ㉤의 문화적 차이는 문화 지체가 아니라 문화의 위계적 서열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전달되면 문화 전파, 문화 접촉으로 문화가 변하면 문화 접변,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변화 속도 차이로 부조화가 생기면 문화 지체로 판단한다. 다른 문화를 자기 문화의 기준으로 서열화하면 자문화 중심주의, 그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면 문화 상대주의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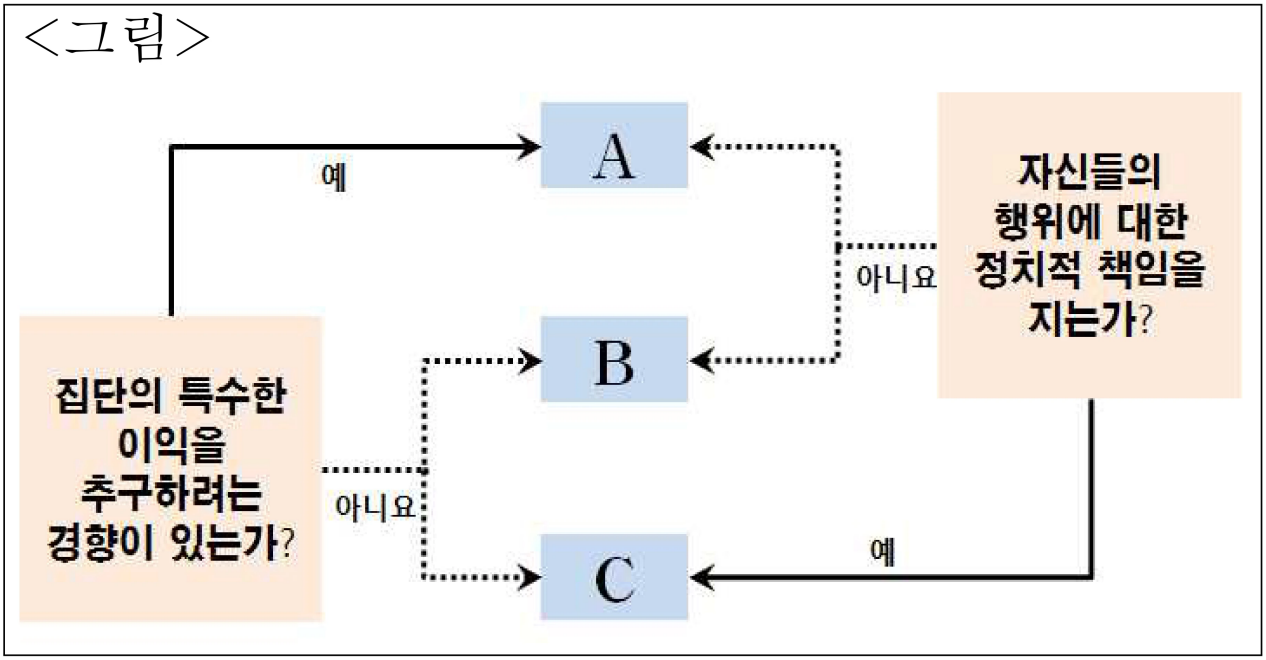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전달은 문화 전파, 접촉에 따른 변화는 문화 접변, 변화 속도의 불일치는 문화 지체이다. 서열화는 자문화 중심주의, 맥락 존중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그림>의 A~C는 정치 참여 주체이다. 이에 관한 옳은 설명은 보기에서 모두 몇 개인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림>



<보기>

㉠ A, B는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A는 C와 달리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 B는 A와 달리 자기 집단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한다.

㉣ A~C 모두 정치 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 A는 C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B, C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도식의 두 판단 기준을 따라 정당·이익집단·시민 단체를 식별하고, 각 정치 참여 주체의 기능과 책임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A는 이익집단, 특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B는 시민 단체, 정치적 책임을 지는 C는 정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 판단
㉠ O: 이익집단(A)과 시민 단체(B)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 과정에 투입하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 X: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는 이익집단(A)이 아니라 정당(C)이다. 올바르게는 'C는 A와 달리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이다.
㉢ X: 자기 집단의 특수하고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는 시민 단체(B)가 아니라 이익집단(A)이다. 올바르게는 'A는 B와 달리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이다.
㉣ O: 정당(A가 아니라 C), 이익집단(A), 시민 단체(B)는 모두 입법부·행정부와 같은 국가 기관이 아닌 정치 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 X: 정치 사회화는 정당(C)도 수행하므로 'A는 C와 달리'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A와 C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이다.
㉥ X: 정당(C)은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시민 단체(B)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C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B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다.

① O: 옳은 설명은 ㉠과 ㉣의 2개이므로 맞는다.
② X: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③ X: '4개'가 아니라 '2개'이다.
④ X: '5개'가 아니라 '2개'이다.

오답 포인트

정당과 이익집단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충원과 집권을 통한 정치적 책임은 정당의 고유한 특징이다. 또한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과 공익을 지향하는 시민 단체의 방향을 뒤바꾸면 ㉢을 잘못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식에서는 먼저 '특수 이익 추구=이익집단', '정치적 책임=정당'을 대응시키고 남은 주체를 시민 단체로 확정한다. 그다음 정치적 충원·정치적 책임은 정당, 특수 이익의 표출은 이익집단, 공익 추구는 시민 단체라는 기준으로 각 보기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익집단은 특수 이익, 시민 단체는 공익, 정당은 정치적 충원·집권·정치적 책임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두 국가의 정치 상황과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국가에서 나타날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국 : B당 소속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

정 당	A당	B당	C당	D당	E당	계
의석수	80	75	40	3	2	200

을국 : 정부안이 의회에서 부결, 의회 해산 후 총선거를 실시

정 당	A당	B당	C당	D당	E당	계
의석수	75	70	25	20	10	200

<보기>

㉠ 갑국은 A당이 다수당으로 집권 여당이 될 것이다.

㉡ 을국은 정당 간 정책 연합이 시도될 것이다.

㉢ 갑국은 의회와 행정부 대립 시 국정 운영이 곤란할 것이다.

㉣ 을국의 정부 형태는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 갑국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가별 정치 상황에서 정부 형태를 판별하고, 의석 분포와 결합하여 여소야대·연립 정부·권력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1. 갑국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므로 대통령제임을 확인한다.
2. 을국은 정부안 부결 뒤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므로 의원내각제임을 확인한다.
3. 갑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속한 B당이 75석으로 과반수 101석에 미달하고, 을국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

핵심 근거

㉠ X: 갑국의 집권 여당은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B당이다. A당은 80석으로 제1당이지만 과반수도 아니며 집권 여당도 아니다. 올바르게는 '갑국에서는 B당이 집권 여당이고, A당이 원내 제1당이다'이다.
㉡ O: 을국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 101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당 간 정책 연합이나 연립 정부 구성이 시도될 수 있다.
㉢ O: 갑국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인 B당이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이다.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면 법안 처리 등이 막혀 국정 운영이 곤란해질 수 있다.
㉣ X: 의원내각제의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성립하며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올바르게는 '을국의 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이다.
㉤ X: 갑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을국과 같은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틀리고 ㉢만 옳다. '㉠, ㉢'이 아니라 '㉡, ㉢'이 옳은 조합이다.
② X: ㉡은 옳지만 ㉣은 틀리다. ㉣의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표현은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로 고쳐야 하며, 옳은 조합은 '㉡, ㉢'이다.
③ O: ㉡과 ㉢이 모두 옳다. 을국에서는 과반 정당이 없어 정당 간 연합이 시도될 수 있고, 갑국에서는 여소야대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가능성이 있다.
④ X: ㉢은 옳지만 ㉤은 틀리다. ㉤의 '갑국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한다'는 표현은 '을국과 같은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하며, 옳은 조합은 '㉡, ㉢'이다.

오답 포인트

갑국에서 A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A당을 집권 여당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대통령제의 집권 여당은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인 B당이다. 또한 의원내각제의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은 서로 대응하며, 내각은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의회 해산과 내각 불신임은 의원내각제의 핵심 표지로 구분한다. 그다음 집권당의 과반수 여부와 과반 정당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여소야대 또는 연립 정부 가능성을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대통령제는 거부권과 권력 분립, 의원내각제는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의 상호 견제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6. 다음과 같은 원/달러 환율 변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6원 오른 1138.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보, 2017.08.31.-

①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한다.
②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한다.
③ 상품수지가 개선되어 통화량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④ 해외여행 경비의 감소로 자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입 가격, 상품수지, 통화량, 해외여행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달러 환율 상승은 1달러를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낮아져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품과 해외여행의 원화 비용은 높아져 수입과 해외여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가 개선되고 외화 유입이 늘면 통화량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한다'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표시 가격이 같은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은 하락하므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한다'이다. 같은 달러 가격의 수입품을 사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O —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는 상품수지를 개선한다. 상품수지 개선에 따른 외화의 순유입이 원화로 교환되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해외여행 경비의 감소로 자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한다'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같은 달러 경비를 마련하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해외여행 경비는 증가하고 자국민의 해외여행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답 포인트

환율 상승을 원화 가치 상승으로 거꾸로 해석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 환율 상승은 달러 가치 상승이자 원화 가치 하락이므로 ①·②·④의 가격과 수량 변화 방향이 모두 반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달러 강세·원화 약세'로 바꿔 읽는다. 그다음 수출품의 외화 가격은 하락, 수입품과 해외 지출의 원화 비용은 상승한다고 연결하면 수출 증가·수입 감소·해외여행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약세이며, 일반적으로 수출 증가·수입 감소·상품수지 개선·해외여행 감소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손해는 반드시 금전으로만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손해 배상은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다.
㉢ 가해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명예 훼손이 원인일 경우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① ㉠
② ㉡, ㉢
③ ㉠, ㉡, ㉣
④ ㉠, ㉢, ㉣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방법, 인과관계 요건, 명예훼손의 특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손해를 메우는 전보배상의 원칙과 금전배상이라는 일반적 방법을 서로 다른 층위로 이해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전보배상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경제적 상태와 같아지도록 피해자의 손해를 메우는 배상이다.
상당인과관계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원인·결과의 관련성이 있는 상태이다.

핵심 구분

손해배상의 목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 발생 전과 같은 경제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 반면 배상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이다.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하는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금전배상이 절대적인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옳지만 ㉡과 ㉣도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 옳은 설명이 ㉠뿐이라는 조합
올바른 표현: 옳은 설명은 ㉠, ㉡, ㉣이다.

② X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틀린 표현: 가해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
올바른 표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O
㉠은 금전배상이 절대적인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설명이고, ㉡은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 발생 전의 경제적 상태를 회복시키려는 배상 목적을 설명하며, ㉣은 명예훼손에 관한 민법 제764조의 특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 ㉡, ㉣을 고른 조합이 맞다.

④ X
㉠과 ㉣은 옳지만 ㉢은 옳지 않고, 옳은 ㉡이 빠져 있다.
틀린 표현: ㉢을 포함하고 ㉡을 제외한 조합
올바른 표현: ㉢을 제외하고 ㉡을 포함하여 ㉠, ㉡, ㉣을 골라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의 '금전으로만'과 ㉡의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서로 모순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은 배상의 방법이 금전에 한정되는지를 묻고, ㉡은 손해배상이 지향하는 전보의 목적을 묻는다. 또한 ㉢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긴다고 오해하게 하지만,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해배상 문항에서는 먼저 '무엇을 회복하는가'라는 목적과 '무엇으로 배상하는가'라는 방법을 나눈다. 이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명예훼손에는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처분이 가능한 특칙이 있음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목적은 손해의 전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전, 명예훼손은 명예회복 처분도 가능하다.

NoteBase

문 18. 국회의 권한인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헌법 재판소가 심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가)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안하고 재적 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가)의 절차를 통해 고위 공무원이 파면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③ (나)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안하고 재적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경우, (가)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의 요건과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위헌·위법이 필요한지, 의결정족수가 무엇인지, 파면이 다른 법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탄핵소추는 고위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파면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해임건의는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정치적 통제 수단이다.

핵심 구분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정족수가 적용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치므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헌법 제63조에 따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위헌·위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지의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예외이다.
틀린 표현: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안하고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올바른 표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X
탄핵결정의 효과는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치며, 그 공무원의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올바른 표현: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 X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틀린 표현: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안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올바른 표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O
탄핵소추는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만 가능하지만, 해임건의는 위헌·위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도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가중 정족수인 '과반수 발의·3분의 2 이상 찬성'을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에 바꾸어 붙인 함정이다. ②는 파면이라는 신분상 효과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혼동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상이 대통령인지 그 밖의 공무원인지 확인한 뒤 탄핵소추의 위헌·위법 요건과 정족수를 판단한다. 이어 해임건의는 위헌·위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정치적 통제 수단이라는 점을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일반 탄핵과 해임건의는 '3분의 1 발의·과반수 찬성', 대통령 탄핵만 '과반수 발의·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탄핵 파면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법을 분류한 것이다.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분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실체 관계	절차 관계
규율하는 영역에 따라	공적 영역	(가)	(나)
	사적 영역	(다)	(라)

① (가)는 권리·의무의 존재 여부, 권리·의무의 내용 등을 규율한다.

② (나)에는 형법과 행정법이 포함된다.

③ (다)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법이나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사 소송법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라)는 국가 및 공공기관 대 국민간의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법을 규율 영역에 따라 공법·사법으로, 규율 내용에 따라 실체법·절차법으로 나누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도표에서 (가)는 공법·실체법, (나)는 공법·절차법, (다)는 사법·실체법, (라)는 사법·절차법에 해당한다.

핵심 개념

공법은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와 국민 간의 공적·권력적 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개인 상호 간의 사적·대등한 관계를 규율한다. 실체법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과 그 내용을 정하고, 절차법은 실체법상 권리·의무를 실현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한다. 따라서 공법·실체법의 예는 헌법·행정법·형법이고, 공법·절차법의 예는 형사소송법·행정소송법이며, 사법·실체법의 예는 민법·상법이고, 사법·절차법의 예는 민사소송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공법 중 실체법에 해당한다. 실체법은 권리·의무의 존재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므로 옳다.
② X. 형법과 행정법은 공법이라는 점에서는 맞지만, 절차법인 (나)가 아니라 실체법인 (가)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은 '(나)에는'이며, 올바르게는 '(가)에는 형법과 행정법이 포함된다'이다. (나)의 예로는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 있다.
③ X.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규율하고 민사소송법을 예로 드는 것은 사법·절차법인 (라)의 설명이다. 틀린 표현은 '(다)는'이며, 올바르게는 '(라)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를 규율하며 민사소송법을 예로 들 수 있다'이다. (다)는 민법·상법과 같은 사법·실체법이다.
④ X. 국가 및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수직적·권력적 관계는 사법인 (라)가 아니라 공법인 (가)와 (나)가 규율한다. 틀린 표현은 '(라)는'이며, 올바르게는 '공법인 (가)와 (나)는 국가 및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수직적 관계를 규율한다'이다. (라)는 개인 상호 간의 사적 관계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형법·행정법이 공법이라는 사실만 보고 (나)를 고르도록 유도하지만, 두 법은 공법 중 실체법이다. ③은 민사소송법의 '민사'에 주목해 사법·실체법으로 오인하게 하지만, '소송'은 권리 실현 절차이므로 사법·절차법이다. ④의 '수직적 관계'는 사법이 아니라 공법을 가리키는 결정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관계의 성격으로 공법과 사법을 가르고, 다음으로 무엇을 정하는지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을 가른다.
국가와 국민의 권력적 관계이면 공법, 개인 간 대등한 관계이면 사법이며, 권리·의무의 내용이면 실체법, 소송 등 실현 방법이면 절차법이다.

암기 포인트

공법·사법은 '누구 사이의 관계인가', 실체법·절차법은 '내용인가 실현 방법인가'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20.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장을 구분하는 첫째 기준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이다.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면 (㉠)이다.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면 (㉡)이다.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면 이 기업들이 공급하는 상품이 동질적인지, 차별화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수많은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한다면 이 시장은 (㉢)이다.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인 상품을 공급한다면 이 시장은 (㉣)이다.

① ㉠은 과점시장이다.

② ㉡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③ ㉢은 기업들의 자유로운 진입이 허용된다.

④ ㉣은 현실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업 수와 상품의 동질성·차별성을 기준으로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독점시장: 하나의 기업이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 과점시장: 소수의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 독점적 경쟁시장: 다수의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며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이다.
㉣ 완전경쟁시장: 다수의 기업이 동질적인 상품을 공급하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기업이 하나인 독점시장이다. 틀린 표현은 '과점시장'이며, 올바르게는 '독점시장'이다.
② X — ㉡은 소수 기업이 경쟁하는 과점시장으로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틀린 표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며, 올바르게는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이다.
③ O — ㉢은 다수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다.
④ X — ㉣은 다수 기업이 동질적인 상품을 공급하는 완전경쟁시장이다. 틀린 표현은 '현실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며, 올바르게는 '현실에서 그대로 충족되기 어려운 이론적 경쟁시장으로 완전경쟁시장'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업 수만 보고 ㉣과 ㉤을 같은 시장으로 판단하기 쉽다. 기업이 다수일 때에는 상품이 차별화되면 독점적 경쟁시장, 동질적이면 완전경쟁시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업 수를 확인한다. 하나이면 독점, 소수이면 과점이다. 다수이면 상품의 성격을 다시 확인하여 차별적이면 독점적 경쟁, 동질적이면 완전경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하나-독점, 소수-과점, 다수·차별-독점적 경쟁, 다수·동질-완전경쟁이다.

NoteBase